

광주·전남 통합, 소득 증대에 복지·일자리 확대 긍정 효과

정부, 서울시 준하는 위상·재정 특례·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약속
특별법 제정·주민 동의 절차·소지역주의 극복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6월 통합 단체장 선출이라는 파격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행정통합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양 시도지사가 사흘 만에 전격 합의를 이뤄내며 ‘톱다운(Top-down)’ 방식의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과거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시민의 요구는 명분보다는 절저한 ‘실리’와 ‘공감’에 방점이 찍혀 있어 향후 추진 과정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는 김 지사가 추진기획단 구성을 제안하고 강 시장이 즉각 화답한 지 불과 3일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양 단체장은 실무진 검토를 거치는 기존의 상향식 방식을 폐기하고, 리더의 결단으로 난관을 돌파하는 하향식 방식을 택했다.

여기에는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이 주도하는 메가시티 논의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과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본권 의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지역 주도 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광주·전남의 융진에 힘을 실었다.

정부 역시 통합 지방정부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특례를 약속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공언한 상태다. 민주당 또한 오는 2월 말까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 같은 속도전과 달리, 통합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의 정서는 ‘삶의 질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월 광주전남연구원이 발표한 최종보고서는 현재의 통합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나침반이다.

당시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시민 2000여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시각차가 뚜렷했다. 전문가는 지자체 간 갈등 조정이나 행정구역 개편 같은 거시적 체계 구축을 중시한 반면, 시민은 당장 피부에 와닿는 교통망 확충과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시민은 행정통합 시 가장 시급한 과제로 통합교통체계 구축(17.5%)을 지목했고, 경제통합 분야에서도 SOC 확충(25.2%)을 1순위로 원했다.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 역시 소득증대와 복지혜택, 일자리 기회 확대 순으로 나타나 내 지갑을 채워주는 경제적 기회로서의 통합을 갈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문가들은 경제 활성화와 갈등 조정을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해 산업 구조적 접근과 거버넌스 구축에 무게를 뒀다. 이는 행정 조직의 물리적 결합에 치중할 경우 시민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당시 조사에서도 상생협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자기 지역을 우선하는 소지역주의(33.5%)가 꼽혔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시도 간 주도권 다툼이 통합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민주의 문 앞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선언문’을 발표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실제로 현재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단체장의 의지만으로 밀어붙이는 통합이 졸속으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통합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시민인 과반인 56.1%가 주민투표를 선호한다고 응답해 직접 참여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는 3일 만의 단체장 합

의로 추진되는 현재의 방식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대목이다.

결국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2월 특별법 제정이라는 입법 속도전과 병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경제 분야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소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어

떻게 설계하느냐가 광주·전남 대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시민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절차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5개월 남짓 남은 지방선거 일정 속에서 얼마나 내실 있는 여론 수렴을 이뤄낼지 지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행정통합, 30년째 ‘도돌이표’… 상처만 남긴 채 희망고문

“한 뿌리니까 다시 합치자.” 30년 가까이 선거철이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광주·전남 행정통합 구호다.

하지만 번번이 장밋빛 청사진만 요란했을 뿐, 실질 진전 없이 지역민에게 피로감만 안겨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차례 통합 논의 무산=광주·전남의 통합 논의는 크게 세 차례 시도됐다.

첫 번째 통합 논의는 민선 자치가 본격화된 1995년 시작됐다. 당시 허경만 전남지사가 사·도 통합 추진을 선언하며 불을 지폈다.

전남도는 통합추진 전담기구까지 만들며 적극적이었으나 광주시는 달랐다. 광주시의회와 시민사회는 광역시 승격 불과 10년 만에 다시 일반시로 전락할 수 없다는 반대 논리를 폈고, 결국 전남지사가 1998년 통합 포기를 선언하며 막을 내렸다.

두 번째 논의는 2000년대 초반 ‘전남도청 이전’ 문제와 맞물려 불거졌다.

당시 광주 정치권은 도청이 빠져나가면 도심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며 카드로 통합

론을 꺼내 들었다.

진정한 상생보다는 도청 이전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용 성격이 짙었다. 결국 2005년 도청이 광주시를 떠나 무안군 남악신도시로 이전하면서 통합 논의도 자연스레 소멸했다.

가장 최근인 2020년,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연방제 수준의 통합’을 제안하며 3차 논의가 점화됐다.

사·도지사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용역까지 진행했으나, 군공항 이전 등 민감한 현안을 남지 못했다. 민선 8기 들어서는 통합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오히려 전남도는 최근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며 독자 생존 전략을 강화했었다.

과거 세 차례의 실패가 주민 공감대 없이 관 주도로 이뤄졌고, 통합청사 위치나 공무원 구조조정 같은 예민한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했다.

◇0%대 저성장 위기가 쏘아올린 ‘통합’=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최근 급부상한 배경에는 ‘경제적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지난 2024년 발간한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 논의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페

이퍼 분석 결과는 예 지금 통합이 시급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광주·전남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9%로 추락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이 2.9%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처참한 수준이다.

지역 경제의 허리인 제조업 부진은 더 심각하다. 2009년 이후 광주·전남 제조업 실질성장률은 연평균 1.9%로 둔화했고, 최근 3년은 0.9% 성장에 그쳤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니 청년도 떠난다. 전남의 청년 인구(15~29세) 비중은 14.3%로 비수도권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합 논의가 성공하려면 정치적 구호인 행정통합이 아닌 실리적인 경제 통합부터 단계적인 통합을 조언한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광주·나주·목포를 잇는 ‘에너지 벨트’, 광주·장성을 잇는 ‘인공지능(AI) 벨트’ 등 6대 혁신 벨트를 구축해 산업 생태계부터 하나로 묶어야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장·지사 출마 예정자들 엇갈린 반응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격적으로 광주·전남 통합 의제를 던지자 지역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현직 단체장들이 통합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6·3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군에서는 큰물의 통합에는 찬성하면서도 단계적 통합 등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현재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물론, 정준호(광주 북구갑)·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과 문인 북구청장 등은 통합 논의에 적극적이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이 시급하다는 명분이다.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광주시장 후보군인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정치권 주도의 하향식이 아닌 사·도민 주도의 상향식 통합”을 강조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전남특별자치도를 외치다 갑작스럽게 통합을 선언한 것은 무책임하다”며 김 지사의 ‘오락가락 행정’을 직격했다.

논란의 핵은 통합 시점이다. 전남지사 후보인 주철현(여수갑) 의원과 민형배 의원은 “2030년 원년”을 주장하며 속도 조절을 외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 등 일부 잠재적 후보군도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이에 동조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단계적 통합론’이나 ‘2030년 통합설’을 두고 후보자들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합이 되면 시장·지사 자리가 하나로 줄어드는 만큼, 일단 이번 선거에서 당선돼 ‘4년 임기’를 채우고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행정통합이 선거용 일회성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사·도민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여젠다가 정치인들의 ‘자리보전용’ 셈법이나 ‘선거 공학’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